

북한 외무성대변인 성명의 의미

전 성 훈

통일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북핵폐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보도들이 불능화 작업 중단과 핵시설 원상복구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고 있지만, 이 성명에는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성명의 내용은 북한정권이 그동안 견지해왔고 또 앞으로 견지해 나갈 전략의 골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6자회담을 통한 신속한 북핵폐기가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함몰되어서 북한의 장기적인 핵전략을 간과하고 있던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큰 성명이다.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 6자회담의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것이다. 따라서 핵무기 폐기단계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남한과 주한미군의 핵무기도 같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둘째, 검증도 북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해서 동등하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남한 땅에 핵무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과거에 핵무기가 배치되었던 위치와 규모 등 핵무기 배치 역사에 대한 검증도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셋째, 핵신고에 대한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북한만 검증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10·3 합의에는 신고에 대한 검증이 테러지원국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검증 요구가 합의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성명에는 북한이 6자회담을 보는 시각과 회담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북한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것은 결국 북한이 1990년대 초 핵문제를 협의하던 때부터 주장하던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말한다. ‘비핵화’로 이름을 바꿨을 뿐, 핵을 자산으로 주한미군의 입지를 약화시키겠다는 북한의 전략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서 핵폐기 단계에서 북한과 남한 및 주한미군에 대해서 동시에 동등하게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난 90년대의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번 성명을 통해서 적어도 북한과 한·미 양국 사이에 현 상황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6자회담의 목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견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지난 20여 년간 일관되게 견지되어 온 북한의 핵전략을 보면, 6자회담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북한의 전략을 간과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애매한 합의를 하는 행태가 향후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9·19 공동성명에서 6자회담의 목적을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로 명시한 것이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거론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했다. 북핵폐기라는 6자회담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고 협상력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힐 차관보가 금년 4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불능화·신고와 검증에 관해서 애매한 합의를 함으로써 미국 내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한 것도 같은 사례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정치적 목적과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북한과 선부른 합의를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하게 할 뿐이라는 익숙한 교훈을 또 한 번 던져주었다.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북한의 결정은 부시 행정부와 의 거래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러나는 부시에게 더 이상 선물을 주고 싶지 않던 북한으로서는 강력한 검증요구가 좋은 구실이 되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시간에 쫓기는 부시 행정부를 거세게 몰아쳐 보자는 계산 하에, 대선과정에 발목이 잡힌 부시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벼랑 끝의 전술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앞으로 북한은 6자회담이란 판을 깨지는 않은 채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고 미국의 대선 과정을 관망하면서 차기 미 행정부와 새로운 거래를 시도하려 할 것이다. 불능화 작업 중단의 타을 미국으로 돌리는 것은 대선 주자들에게 ‘미국이 하는 만큼 북한도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는 북한의 이러한 대미 협상전략이 과거처럼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